



3면

"현대차-울산물량, 전주로 이관해달라"

전주매일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음 8월 23일) 제286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을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16개 사업 1조3609억원 반영 역대 최대

도로정책심의위 거쳐 확정

노을대교 등 핵심사업 반영 인구·교통수요 부족 등 불리함 속 최대 성과 거둬

전북도는 국토부가 지난 2018년부터 수립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5차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전국적으로 검토대상 177건, 20356.506억원 중 총 116건, 10335.506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국 8개도(권역) 중 금액 및 건수 모두 4위로 타 시·도와 비교해 인구·교통수요 부족 등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반영(통과)을 측면에서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제3차 계획에서 10건(7739억원), 제4차 10건(1381억원) 반영으로 전국 최하위권이었던 점을 비추어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이날 발표된 국도·국지도 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 제8조'에 따라 국토부에서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발표시기만 되면 전북도는 매년 좌절을 맛보아야 하는 아픔의 시간이었다.

약 20년전부터 추진한 노을대교를 비롯한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주요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매년 경제성과 교통수요 부족 논리에 발목이 잡혀 성사되지 못했다.

민선 6기 이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응을 위해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

먼저,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



제5차 국도·국지도 반영사업 현황.

(사진=전북도청 제공)

난 2017년부터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통해 '전북도 도로인프라개발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제3차 계획에 반영·건의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했고, 핵심사업인 노을대교 건설을 민선 6기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했다.

또한, 2018년 제5차 계획의 국토부 수요조사에 대해 56개 신규 사업구간을 발굴·제출하는 등 물량 공세를 통해 1차 검토대상으로 20개 구간이 선정되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4월 기재부(KDI) 에타착수에 따른 비용·편익, 교통량 분석 등 전문분야 논리적 대응을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에타 대응방안'을 작년 하반기 전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에타수행에 따른 논리적 대응을 뒷받침했다.

이와 더불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국토위 김윤덕 의원, 윤준병·이원택·안호영·김수홍·한병도·정운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이 아낌없는 측면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북도 지휘부는 지난해 10월 일괄에타 1차 점검시 노을대교 건설사업의 경제성(B/C) 미달로 탈락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되자,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는 육지부를 제척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착공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14조원 규모로 고창구시포 인근 해상 조성중인 서남해안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미래 교통수요를 편익 산정시 반영할 것을 주된 경제성(B/C)을 에타 통과기준인 0.5이상으로 당초보다 2배 이상 상향 조정토록했다.

한편 일괄에타 최종 관문인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AHP)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경제성, 지역균형발전은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정책성 발표자료(PPT) 작성시 사업발달지리효과, 생활여건향상, 안정성장상 등이 잘 부각되도록 했다.

또 분과위원회 당일 기재부 출신인 우병기 전 정부부처사가 직접 참석해 사업 반영을 직접 건의·어필한 것도 큰 성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향후 국토부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최종 확정하고, 향후 5년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기본설계 추진 등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호상 기자

"사통팔달 전북 초석 다져"

송하진 도지사,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관련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서도 높은 성과 거둬 노을대교 등 반영, 이동·물류비용 절감 효과 기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를 드디어 해결해 가슴이 시원하다. 이제 사람과 물자가 교류하고 마음껏 오가는 '사통팔달 전라북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

"현장에서 낡고 오래된 도로를 볼 때마다,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기필코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대응했고 경제성을 이유로 번번이 우선순위에 밀려야만 했던 서러움을 도민과 함께 이겨냈다."

28일 국토부가 최종 확정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총 16건, 1조3609억원을 반영하며,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둔 송하진 도사는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전북도라는 '언더독(Underdog)'이 이뤄낸 승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인구와 교통수요 등 모든 면에서 열세였던 전북도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서 전국 8개도(권역) 중 사업 수와 금액 모두 4위를 기록하며, 지역 규모 대비 최고·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제3차, 제4차 계획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괄



목할 만한 실적을 거둔 것이다.

이에 대해 송 도사는 "양적 측면 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한 '반영(통과)율의 경우 전국 평균이 65.5%에 비해 전북도는 80%를 기록했다. 전북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통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20년 숙원이었던 '노을대

교'를 비롯해 '국도도 익산 오산 신지 ~ 영만 구간 사업', '국도49호 정읍 부전 ~ 칠보 구간 사업', '국지도 55호 완주 소양 ~ 동상 구간 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반영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와 이동 및 물류비용 절감 겨울철 교통무질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등 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 도사는 "5년 주기로 국도·국지도계획이 확정될 때마다, 인구, 교통수요 부족 등 경제성을 이유로 마주해야만 했던 좌절과 아픔을 극복해냈다"면서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노을대교 육지부 제척, 새만금 미래 교통수요 경제성(B/C) 반영 등 적극적으로 치밀한 대응 전략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또, "김성주, 김윤덕, 윤준병, 안호영, 김수홍, 한병도, 정운천, 이용호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사업별로 역할을 맡아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전북연구원과 실국이 대응 논리 발굴과 정부 실책에 노력해준 덕분에 불리한 여건을 이겨냈다"면서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으로의 과제를 묻는 질문에 송 도사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인 만큼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예산 확보 등 행정적, 정무적 노력을 끝없이 이어가겠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께서도 협력과 배려의 힘을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완주군 봉동읍 산사태 취약지역을 28일 방문했다.

"땅밀림 지역 사고 예방 보강공사 신속"

조봉업 행정부지사, 봉동 산사태 취약지역 등 현장 찾아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완주군 봉동읍 산사태 취약지역을 28일 방문했다.

조 부지사는 지난 14일 고창군 '오산저수지'와 '국민여가캠핑장'을 점검한 데 이어, 2주 만에 또다시 현장을 방문, 도민의 안전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날 조 부지사가 점검한 봉동읍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점질토와 사질토에 의해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땅밀림

지역이었다.

'땅밀림'은 산사태 지역과 다른 퇴적암 지역에 점토 성분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도내 일부 지역이 이 같은 땅밀림에 취약하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장수군에서 산사태로 떠밀려온 흙더미에 주택이 파묻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었다.

이날 조 부지사는 또다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대진단에 나섰다.

조 부지사는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에서 현장을 돌고 땅밀림 상태 경사면 토사 침식 현황 등을 직접 점검했다. 아울러 인근 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연계를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주문했다.

조봉업 부지사는 "이곳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주변에 레미콘 공장까지 있어 사고 발생 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조속한 행정절차를 진행, 신속하게 땅밀림 산사태 안정화 공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산사태 대처요령 등을 반복 교육해 인명피해 제로화에 달성해달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